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1년 1월 1차 (2021.01.01. ~ 1.15)



주요 현안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함,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음.

- 2019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0.5점으로 2018년(50.1점) 보다 평균 0.4점 증가하여 일·생활 균형 수준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영역별로 살펴보면, “일 영역”에서는 초과근로 시간이 감소(13.3시간→12.2시간)하고 휴가 일수가 증가(5.5일→6.2일)하는 등 일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개선 효과를 보였음.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2.30.]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816

2021년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관련, 1월 5일(화)부터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힘.

- 성범죄자 전출입 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에 카카오톡으로 고지
- 모바일 고지 미열람자에게는 우편으로 고지
- 일반 국민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476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함.

-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 제공
-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
-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 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 예정
-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3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62829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2021년 본격 시행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가능
- 비양육부·모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양육비 이행 점차 개선
- * 양육비 이행률 : ('15) 21.2% → ('17) 32.0% → ('19) 35.6% → ('20.11월) 36.8%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05]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XiiyDeYHfKM5Y4Q0hq8x9FDM.mogef10?mid=news405&bbtSn=70747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령 시행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힘.

- 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 광고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 가능
- 결혼중개 사업장의 폐업·휴업 여부, 행정처분 현황 등 공시항목 확대
- 결혼중개업자 신규 등록 전 인권보호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1.0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486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27만 명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전년 대비 점검인원은 10만 명 늘고, 적발인원은 28명 감소
- 점검인원 ('19) 317만 명→('20) 327만 명, 적발인원 ('19) 108명→('20) 80명
- 적발된 성범죄 경력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1.1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502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2021-01-05	입양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 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양부모는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안 제16조의2, 제29조의7제1항, 제50조제1항 신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2021-01-11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 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 강화(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 제1항제4호 신설, 제21조제3항)
건강·복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2021-01-07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외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안 제11조제2항제2호 등)
다문화·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2021-01-04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 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안 제14조의3 신설)
일·생활 균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0-12-30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안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4조)

젠더 폭력· 안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2020- 12-28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아동 보호(안 제55조 및 제61조제2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2020- 12-29	성매매 예방 실시대상에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 국가기관 등 장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안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2020- 12-29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안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2020- 12-29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안 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2020- 12-29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안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	2020- 12-29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행위자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 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2020- 12-3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처벌에 있어 ‘소지’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확히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범위 명시(안 제11조 제5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2020- 12-30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되면 감사원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유포로 피해를 입은 자에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의4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2020- 12-30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톱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 마련(안 제2조제1호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2020- 12-31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재정비,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에 나설 수 있도록 체포 규정 신설(안 제1조, 제5조 및 제9조제2항, 안 제3조의3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1- 01-04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의 주기 및 지원하는 지도·관리의 내용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설치 규정(안 제16조의2, 제29조의7제1항, 제50조제1항 신설)

젠더 폭력· 안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6인)	2021- 01-05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법원의 의무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위험 예방(안 제4조, 제5조, 제15조의2, 제53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1- 01-05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 보장(안 제10조 제4항 신설, 안 제11조제6항 신설, 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안 제50조제5항 신설, 안제55조, 제61조제2항 신설, 안 제61조의2 신설 및 제63조제1항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4인)	2021- 01-05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 시행(안 제22조의6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3인)	2021- 01-05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저해 침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의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0조제2항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2021- 01-05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2021- 01-05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있으나,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매우 부족함. 이에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동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는 경우 당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하여 정인자와 같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6인)	2021- 01-05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안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2021- 01-06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고 아동학대범죄 수사에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 제고(안 제4조 및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의2)

젠더 폭력· 안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2021-01-0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별 1개소 이상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제5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2021-01-06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는 가중하여 처벌(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2021-01-06	현행법에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보호 명령 기간을 연장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안 제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9조, 제5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2021-01-07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관리의 목적으로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의무화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실효성 제고(안 제11조의2 제1항 및 제61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1-01-07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	2021-01-07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 보조 모색(안 제48조제2항 및 안 제49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2021-01-07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 최소화(안 제2조제4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	2021-01-07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감호와 양육,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제62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1-01-08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 제고(안 제36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2021-01-08	부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3조제7호)

젠더 폭력· 안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	2021- 01-08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에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명시(안 제3조제7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2021- 01-08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지원(안 제5장의2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2021- 01-08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 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1- 01-11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하여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안 제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2021- 01-11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 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 절차 안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건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안 제11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2021- 01-11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 임용 시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자격조건 강화(안 제22조)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원장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12.30	한겨레	[왜냐면] 저출산 시대 새로운 길, 성평등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76626.html
01.07	헤럴드경제	[만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계적 성평등 연구기관으로 키운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2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2019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및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	12.31	서울경제	전국 17개 시도 최고의 '워라밸' 수준 높은 도시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WBC9XN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조사	12.31	여성신문	[92년생 김지영①] 다 타버린 여성들...그래도 '페미니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8
9월 여성동향	01.04	아시아경제	[신년기획]"여자라는 꼬리표, 떼고 삼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0413395726770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01.11	한겨레	[아이 귀한 세상] ②출산율에만 매달리면 해답 안 보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7263.html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31	한겨레	'낙태죄 없는 세상' D-1, 새로운 세계서 풀어야 할 숙제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6692.html
01.01	헤럴드경제	2021년 사라진 낙태죄...“처벌의 시대 끝났지만, 입법 공백 여전”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31000700
01.02	노컷뉴스	'낙태죄' 시대 끝났다...“이제는 성·재생산권리 보장해야”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474386
01.04	한겨레	앞치마 여성·정장 남성, 정부 홍보물이 또...	장윤선 부연구위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7263.html
01.06	중앙일보	"립스틱 발라봤자 뭐해"...'마스크노믹스'에 뜨는 중고마켓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962771
01.12	중앙일보	"아기집 보이기도 전에 온다" 대책없이 폐지한 낙태죄 혼란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954

유관기관 연구동향

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국회입법조사처)

☑ 본 연구는 2006년 처음 도입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 해당 입법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성고용 및 관리자 기용 증가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 방안을 제안함.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0.12.31.]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2&brdSeq=33054>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육아정책연구소)

☑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유치원 정책 관련 쟁점과 과제를 제안함.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01.06.]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95&editMode=ADD&board_idx=41220&manage_idx=56&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_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